

파면이나 복귀나... 4일 윤석열 '운명의 날'

현재, 오전 11시 탄핵 선고
청구 111일 만에 결론
8인 중 6명 이상 인용 땀 파면
파면 땀 대선 6월 3일 전망

헌법재판소(현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2·3·4면〉

현재에 탄핵심판 청구가 접수된지 108일만에 선고기일이 잡혔고, 111일만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선고기일 지정을 반겼으나, 현재에 기대하는 선고결과에 대해서는 기각과 인용으로 입장이 갈렸다.

현재는 1일 언론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선고기일을 국회 측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8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8인 체제인 현재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지만, 탄핵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에 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상당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고일인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이 60일 만이다.

결국 6월 3일이 대선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대선 후보등록기간은 5월 9~10일이며, 5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사전투표일은 5월 30~31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을 내리고 그로부터 60일만인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6월 3일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100m 인근 '진공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연합뉴스

현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현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점부터 38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측은 비상계엄은 여당의 '졸탄핵'에 따른 '경고성' 조치였고 계엄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재는 그동안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매일 같이 평의를 열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선고기일이 길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판결에 대한 역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과 재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분하게 현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만을 내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 담양군수 등 전국 21곳 재보궐 선거

광양 시의원·고흥 군의원

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

'4·2 재보궐 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담양군·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8곳 등 전국 21곳에서 실시된다. 〈관련기사 5면〉 전남에서는 담양 군수와 광양 시의원(다 선거구), 고흥 군의원(나 선거구)을 뽑는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각 후보들은 막판 선거유세에 열을

올렸다.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맞붙는다. 공석인 광양 시의원 재선거에는 이돈건 더불어민주당 후보, 임기주 진보당 후보, 박종열 자유통합당 후보가 출사표를 냈고 고흥 군의원 재선거에서는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격돌한다.

재·보궐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담긴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투표소 관계자가 앱 실행과정 및 앱을 통해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휴대전화 화면 캡처 및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트럼프 '글로벌 관세 쓰나미'

자동차 이어 반도체·의약품 등 부과 예고...한국 타격 불가피

이번 주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다.

〈관련기사 4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 이어 이튿날인 3일 0시1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발표한 대로 미국

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좁비 무역' 펜타닐의 미국 유입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했다가 두 차례 유예한 25% 관세가 시행될 계획이다. 두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는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만 부과됐지만, 이제 그 어떤 국가도 예외 없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어 상호관세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으며, 일부 품목별 관세까지 겹치게 되면 한국은 엄청난 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관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데, 미국 자동차 시장은 한국의 자동차 수출의 거의 절반(49.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수출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으로서선 침적산중의 형국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현금 없는 광주 시내버스 운행 첫 날 ▶6면

도수치료 실손보험 대상 제외 ▶9면

KIA, 삼성과 시즌 첫 대결 김도현 선발 출전 ▶18면

내일이 밝는
기회도시 광주

미래차 삼각벨트 완성

자동차 부품 인증/평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개발/생산
전국일반산업단지

220만평
삼각벨트

자동차 실증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광주,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의
중심이 됩니다!

